2020. 11. 25.(수) 언론보도

MBN

2020년 11월 24일 (화)
종합

"개성공단 정상화해야...",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 만든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앵커멘트 】
경기도가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까지 마련하며 평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개성공단입니다.

2012년에는 북측 노동자가 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규모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재개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덕 / 개성공단 기업협회부회장
- "벌써 4년 9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은 게 뭡니까?"

경기도도 이런 염원을 담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로 이전하려다 유엔사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를 대신해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임시 집무실을 열고 1인 시위까지 하며 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 "평화의 틀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도민에게 평화의 틀을 먼저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관계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격려도 잇따르는 가운데, 도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세계일보
2020년 11월 25일 (수)
13B면 전국

경기·軍, DMZ내 부지사 집무실 설치 갈등

파주 도라전망대 앞 광장에 추진
유엔사 불허에 부지사 "월권" 시위
군 당국 "승인절차 진행 중" 해명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파주=연합뉴스

유엔사 관할 비무장지대(DMZ) 내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로 경기도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DMZ 내 비군사적 행동을 막는 것은 유엔사의 월권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 현장 집무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불허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기도 고유 행정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마련하고, 이 부지사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그동안 행해졌던 관행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정부는 '정전협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부지사의 주장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도라전망대가 이미 개방된 공간으로 현재 유엔사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2020년 11월 25일 (수)
03면 종합

"디지털 경제 공유… 남북협력 새 패러다임 열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

남북기후정보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지식교류사업 추진 필요 강조

'이재명 평화 싱크탱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기반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세계 산업 구조가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재편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기후정보 플랫폼 공동구축,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한다고 자문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오후 도청에서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종석 공동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승현(안산4)·김봉균(수원5) 경기도의원, 권영경 전 통일교육원 교수, 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실무진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텀업(상향식)으로 소통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기도는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틈새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북협력 사업이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지식교류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기상재해 정보 플랫폼을 구축, 동북아 차원의 환경협력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북한 온정첨단과학기술 개발지구 간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해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유엔(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판교 테크노밸리와 중국관 실리콘밸리인 중관촌 등을 조성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법안 관련 연구 내용도 안건으로 진행됐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가 한국기업, 북한경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입법 당사자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공동 스타트업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광희기자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일규기자